

경공모 변호사 구속심사에 격분

“특검이 엄청 압박... 정말 힘들고 괴롭다” “노회찬 의원에게 내가 돈 전달한 것처럼 됐다” 지난달 첫 구속수사 시도... 법원, 영장 기각해 특검, 보강수사 후 댓글 조작 공모 혐의 적용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의 주범 '드루킹' 김모(49)씨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도모(61) 변호사가 자신의 두 번째 구속심사에서 "특검팀이 나를 엄청 압박했다"며 격한 감정을 드러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도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컴퓨터장애업무방해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이같은 모습을 보였다. 이날 오전 9시45분 법원 심사에 출석한 도 변호사는 "댓글 조작 공모 혐의와 관련해 소명하고 싶은 게 있다"는 등 취재진의 질문엔 입을 굳게

다문 채 곧바로 심사가 열리는 법정으로 들어갔다. 심사에서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은 도 변호사의 구속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도 변호사 측은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도 변호사는 "정말 힘들고 괴롭다"며 "마치 제가 돈을 노회찬 의원에게 직접 전달한 것처럼 됐다. 제가 노 의원을 죽인 것처럼 기사가 나가기도 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특검팀이 저를 엄청나게 압박했다. 그러나 저는 여태껏 특검팀이 소환하면 출근 성실히 출석

했었다"며 "앞으로도 소환 조사에 열심히 응할 것"이라며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점을 피력했다. 심사를 마친 이 부장판사는 특검팀과 도 변호사 측 주장을 검토한 뒤 이르러 이날 밤늦게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도 변호사가 구속 심사를 받는 것은 특검 수사 개시 이후 두 번째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7일 도 변호사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당시 특검팀은 도 변호사에 대해 지난 2016년 드루킹 측이 고(故) 노회찬 정외당 의원에게 수천만원에 달하는 불법 정치자금 전달하는 데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 과정에서 증거를 위조·제출토록 하는 등 수사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적용했다. 그러나 법원은 같은달 19일 특검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긴급체포의 적법 여부(긴급성)에 의문이 있다"며 "증거위조교사 혐의에 관해 법리상 다름의 여지가 있음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인해 특검팀의 첫 구속수사 시도는 무산됐다. 이에 특검팀은 보강 수사를 거쳐 도 변호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추가 적용, 지난 6일 다시 영장을 청구했다. 도 변호사는 드루킹이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핵심 회원으로 필명 '야보카'로 활동한 인물이다. 그는 경공모 내에서 '법률 스텝'이란 직책을 맡고 있었다. 도 변호사는 드루킹이 지난해 12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일본 오사카 총영사직으로 추천한 대상자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도 변호사는 지난 3월 백운우 민정비서관과 면담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

'실제 거주사실 여부 확인합니다'

전주시, 올해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전주시는 지난 6일부터 오는 9월 28일까지 54일간 '2018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전체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북지부 시스템에서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이 중점조사 대상이다. 조사는 통장과 통 담당 공무원으로 편성된 합동조사반이 실제 거주 및 생존 여부 등을 방문 조사하게 된다. 시는 사실조사 결과 신고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최고·공고로 사실을 알려 실제 거주지로 전입하도록 안내하고 기간 내 미신고자는 거주불명등록으로 직권조치할 계획이다. /송호철 기자

또, 허위신고자나 이중신고자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기존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제정리기간 동안 거주불명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 할 경우 과태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 받을 수 있고,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 최대 3/4까지 경감해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전주시 기획조정국 관계자는 "금번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에 사실조사원의 방문시 시민 여러분의 많은 양해와 협조를 바란다"며 "향후 시민의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송호철 기자

'일회용품 줄이기 홍보대사 전주시'

일회용품 다량 사용 사업장 본격 지도 점검 나설 계획

전주시가 생활 속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친환경도시를 만들기 위해 나섰다. 시는 이달 중순부터 카페 등 일회용품 다량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회용품 줄이기 시행 여부를 중점 지도·점검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매장 내에서는 1회용(플라스틱) 컵 사용은 금지되어 있다. 위반 행위 적발 업소는 위반횟수, 매장면적 등에 따라 최소 5만원에서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실적 위주의 과태료 부과는 지양하고, 현장상황 종합적 판단하여 계도한 후 부과 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일회용품 줄이기 정착하기 위해서는 단속보다는 시민들이 실생활에서 일회용품을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인식의 변화가 중요하다고 판단, 성과 위주의 단속보다는 실천을 이끌어내기 위한 계도 위주의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점검방식은 시청과 완산·덕진구청 업무 담당자, 시민단체 구성원이 함께 해당 주요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일회용 컵(플라스틱) 등에 대한 중점 점검을 진행한 후 현장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현장 확인 시에는 △사업주가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불가를 고지했는지 여부 △

소비자의 테이크아웃 의사표명 여부 △인내문구 부착 홍보 등 규정 준수를 위한 사업주의 노력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이와 관련, 관련 법령에서는 매장 외 장소에서 소비 목적인 경우에만 일회용컵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소비자가 요청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규제 적용의 예외가 될 수 없

다. 또, 종이컵과 컵 뚜껑, 빨대, 완제품인 생수 등은 현행법 상 규제대상이 아니므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영업주들과 시민들의 도의적 실천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민선시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환경 보전을 위한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 확산 노력을 통해 자원 절약은 물론, 쾌적한 생활환경과 안전한 자연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며 "일회용품 다량 사업장 영업주, 매장 직원, 이용 고객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적극 동참해 품격 있고 성숙한 전주시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최근 논란이 있는 컵과 라치 제도에 대해서는 제보를 통한 현장 점검 대상 선정은 가능하지만 제보 자체만으로는 과태료 부과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제보 접수 후 해당 현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송호철 기자



전주시는 이달 중순부터 카페 등 일회용품 다량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회용품 줄이기를 중점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전북 보이스피싱 범죄 지난해보다 57.6% 늘어

기관사칭형 20·30대 여성 집중 대출사기형 40·50대 남성 집중

전북지역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 피해자가 20, 30대 여성에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도내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517건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328건) 대비 57.6% 증가한 수치다. 피해 금액도 49억8000만원으로 지난해 35억원보다 42.3% 늘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크게 기관사칭형과 대출사기형으로 나뉜다.

조사결과 기관사칭형 범죄는 20·30대 여성(53.1%)에게 집중됐고, 대출사기형 범죄는 40·50대 남성(64.6%)에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가 노인층에서 일어날 거라는 인식과 달리 올해 상반기 도내 60대 이상 피해자 비율은 10%에 불과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가 발생하면 범인이 잡히더라도 피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미리 범죄수법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뉴스

자기 배에 불지른 원양업자... 보험금 67억원 타내

수십억원이 넘는 화재 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이 소유한 배에 불을 지른 원양어선 업체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모 원양어선 업체 대표 A(78)씨를 현주선박방화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범행을 공모한 해당 업체 계열사 전 대표 김모(72)씨, A씨의 고향

후배이자 배에 불을 지른 이모(60)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하고, 범행을 도운 직원 이모(53)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16년 11월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 항구에 정박 중인 원양어선에 고의로 불을 질러 보험금 67억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